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681 2017. 9. 11. (월) 교 육 위 원 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: 이숙애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: 2017년 8월 21일

다. 회부일자: 2017년 8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2017년 8월 30일

(제3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O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이숙애 의원 )

#### 가. 제안이유

○ 이 조례는 조례명을 "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"로 개정하여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,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을 "어린이집"까지 확대하는 등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・보완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내용

- O 조례명 변경: 조례명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"으로 함
- 조례명 변경에 따라, 제1조, 제3조제1항 및 제3항, 제5조제1항 및 제2항, 제6조제1항 및 제2항,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"공공기관"을
  "직속기관 등"으로 함(안 제1조, 제3조, 제5조, 제6조, 제8조)
- O 제2조의 제목 "(정의)"를 "(적용범위)"로 변경하여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함(안 제2조)
- 제6조의 사용료 면제 및 감액 사항 중 "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 중등교육법」"을 "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 보육법」"으로, "유치원 및 학교"를 "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" 으로 변경함(안 제6조제1항제1호)

##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# (수석전문위원 김덕환)

- 본 제정조례안은 조례명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원청 소속기관"으로 변경하고,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 대상을 '어린이집'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  - 조례명을 「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 에서 「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하는 것은 본 조례가 담고 있는 주요내용의 의미에 대한 대표성을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사료되며.

-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료 면제 및 감액 대상에 '어린이집'을 포함시킨 것은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 제2항("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")에 비추어 볼 때 개정목적 및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  - 다만,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시설 사용 인원이 증가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, 시행 전 시설관리 및 이용자 안전지도의 의무와 책임이 있는 실제 해당 기관 과의 충분한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해당기관에서 행정의 합리성과 운영의 효율성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- 5. 토 론 요 지: "생략"
- 6. 심 사 결 과: "원안가결"
- 7. 소 수 의 견 요 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:
  - O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간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  - 입법예고 접수의견 : 【별첨자료 1】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#### 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"를 "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"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(이하 "본청" 이라 한다) 직속기관 및 교육 지원청 소속기관(이하 "직속기관 등" 이라 한다)에 대해서 적용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"공공기관"을 각각 "직속기관 등"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등"으로, "공공기관"을 "해당 기관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등"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등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"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"을 "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법」"으로, "유치원 및 학교"를 "유치원, 학교 및 어린이집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"공공기관"을 각각 "직속기관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기관"을 "직속기관 등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"공공기관"을 각각 "직속기관 등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충청북도교육청 공공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	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	제1조(목적)
교육청 <u>공공기관</u> 의 시설·설비	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
등의 사용료 징수 및 운영 등에	속기관
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	
목적으로 한다.	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"공공	제2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「충
기관"이란 「충청북도교육청	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
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에 따라	례」에 따라 설치된 충청북도교
설치된 충청북도교육청(이하	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
"본청"이라 한다) 직속기관	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
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	관(이하 "직속기관 등"이라
<u>다.</u>	한다)에 대해서 적용한다.
제3조(사용대상) ① <u>공공기관</u> 은	제3조(사용대상) ① <u>직속기관 등</u> -
기관의 설치 목적에 따라 학생	
교육활동, 교직원복지, 각종 교	
육행사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	
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<u>공공기관</u>의 장은 기관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관의 시설·설비 일부를 교직원·기 관·단체 및 지역주민에게 사용 을 허가할 수 있다.
- 제5조(실비 징수) ① <u>공공기관</u>의 장은 학생교육활동, 교직원 연 수 및 교육훈련, 평생교육, 각 종 행사 등으로 <u>공공기관</u>을 사 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숙박비, 식비, 교재비, 재료비, 연료비 등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 다.
  - ② <u>공공기관</u>의 장은 실험기구, 교구, 교육관련 자료 및 콘텐츠 등을 제작·공급 하는 때에는 제작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.
- 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 <u>공공기관</u>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.
  - 1. 「유아교육법」 및 「초·중 등교육법」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치된 <u>유치원 및 학교</u> 에서 실시하는 유아 또는 학

③ <u>직속기관 등</u>
제5조(실비 징수) ① <u>직속기관 등</u>
케다 기코
<u>해당 기관</u>
② <u>직속기관 등</u>
•
제6조(사용료의 면제 및 감액) ①
<u> 직속기관 등</u>
1. <u>「유아교육법」, 「초·중</u>
등교육법」 및 「영유아보육
법 <u>유치원, 학교 및</u> <u>어린이집</u>

생 관련 교육 행사

- 2. · 3. (생략)
- 4. <u>공공기관</u>의 설치 목적에 상 응하는 청소년의 문예활동을 장려하는 <u>공공기관</u>의 행사
- 5. · 6. (생략)
- ② <u>공공기관</u>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, 충청 북도충주학생회관 및 제천학생회관의 수영장과 롤러스케이트 장의 사용료를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징수한다.
- 1. ~ 6. (생략)
- 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) ① <u>공공기관</u>의 시설·설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가능 일시, 사용조건, 사용료 등을 확인하고,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신 청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<u>공공기관</u>의 운영 및 시설· 설비 등의 사용신청 및 사용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2.·3. (현행과 같음) 4. <u>직속기관 등</u>
<u>직속기관 등</u> 5. · 6. (현행과 같음) ② <u>직속기관 등</u>
 1. ~ 6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시설·설비 등의 사용절차 등) ① <u>직속기관 등</u>
② <u>직속기관 등</u>

### 관계 법령

#### □ 영유아보육법

제2장 어린이집의 설치<개정 2011.6.7.>

제10조(어린이집의 종류)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 정 2011.6.7., 2011.8.4., 2016.2.3., 2017.3.14.>

- 1. 국공립어린이집 :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2.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: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법 인(이하 "사회복지법인"이라 한다)이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3. 법인·단체등어린이집: 각종 법인(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 리법인)이나 단체 등이 설치·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
- 4. 직장어린이집 :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(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)
- 5. 가정어린이집 :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·운영 하는 어린이집
- 6. 협동어린이집 :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(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)을 결성하여 설치 · 운영하는 어린이집
- 7. 민간어린이집 :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

[전문개정 2007.10.17.]

[제목개정 2011.6.7.]

#### 【별첨자료 1】

# 입법예고 접수의견

(의견 제출기관: 충청북도교육청 재무과 세입재산담당)

### ※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 및 건의사항

O 도내 지방자치단체 감면현황

 구분		감 면 대 상
	- 국	가 또는 도·시의 국경조 행사 및 주최 행사
청주	- 문	화예술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
	– ㅂ]	영리 목적으로 국가 또는 도·시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 및 문화예술단체
	행	사
	- 그	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
		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
충구	전	- 시에서 후원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
	액	- 비영리 목적으로 등록된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고 국가 또는 시에서
		후원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로서 관람료를 받지 않는 행사
		- 「초・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영유아보육법」에 따른 교육기관으로
	반	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학교,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화예술행사
		- 「장애인복지법」제59조에 따라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과「비영리민간
	액	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사용할 때
		-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	- 국	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
	– ㅂ]	영리목적으로등록된문화예술단체가주관하는 순수한 문화예술행사
제천	- 시	에서 후원 협찬하는 치안, 안보, 국방 등에 관한 행사
	- 특	수학교 및 초, 중, 고등학교 문화예술행사
	- 기	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
구분		감 면 대 상
정동 역동 30%	7-1	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
		- 노근리사건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사용할 경우
	44	- 그 밖에 군수가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
	30%	-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사용할 경우
		- 군 자매결연 기관·단체가 사용할 경우

○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및 청소년시설은 각 시·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,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이 시·군마다 상이하므로, 어린이집, 유치원, 특수학교, 초·중·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따른 문화시설, 청소년시설사용시 감면대상을 교육기관까지 확대할 수 있는 기준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